



예멘 난민 보도 3년 후... 난민 보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이현서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1. 들어가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민'이란 주제는 텔레비전 공익광고에나 등장하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적어도 2018년 봄,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피난을 온 예멘 난민들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당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출도 제한 정책, 제주도 무사증 입국 가능국 목록에서의 예멘 제외 조치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난민'이라는 이슈가 떠올랐다. 그리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정권이 이양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다시 한번 난민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2. 우리나라 난민 현황

난민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상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난민협약상 난민 보호 의무에 따라 1994년도부터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시행은 2013년부터 이루어졌다).

난민 현황을 숫자로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71,042건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084명 뿐이었다(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사람은 2,370명으로 집계되는데, 다 합치더라도 3,000명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0년 난민 인정률은 겨우 0.4%로 1,000명 중에 4명 꼴로 간신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¹⁾ 출입국 당국의 난민불인정 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난민 인정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전부 합치더라도, 그 인정률이 약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EU의 난민 인정률 평균이 3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3.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

현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난민과 공존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챌 새가 없었다. 2018년 예멘 난민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들의 입국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 SNS에 떠도는 찌라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난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언론이 난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가 시민들로 하여금 난민을 어떻게 마주하고 맞이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도 '난민'이라는 의제가 낯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잘못된 선입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가 계속하여 발견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려 깊은 시선으로 이슈를 다루며 난민 발생의 원인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보려는 노력도 일부 있었지만 말이다.

가. 2018년 예멘 난민 보도

2018년 봄, 예멘 난민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그동안 '아무데도 없다가 갑자기 코앞에 들이닥친 것만 같은' 난민에 대한 낯선 감정이 언론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낯선 이방인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혐오라는 감정의 형태가 어떻게 조장되고 확산되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정부가 갑자기 예멘을 무사증 입국 가능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6월 언론에

¹⁾ 법무부 난민과 (2021. 1. 28. 화신),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URL: <https://nancen.org/2166?category=118980>

보도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난민이 누군지 잘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보도된 기사 중에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가 난민과 결부된 경우가 많았다. “무사증 제주에 몰려드는 예멘 난민 ‘시끌’”, “[난민쇼크] 스마트폰 무장한 난민들”, “예멘 난민 제주도 길거리 점령”, “말레이서 몰려 온 예멘 난민”, “난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식이다.

단어들을 개별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담고 있는 단어가 특정 맥락에서 특정 대상에 결부되는 현상은 때때로 그 대상의 첫인상을 단단하게 확정지어버리기도 한다. 당시 예멘 난민에 대한 보도 역시 대부분 그랬다. 예멘에서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배경이나, 난민 개개인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은 논의의 장에 들어오기 힘들었다. 다만 예멘 난민이 한 뭉텅이로 집단화된 뒤, ‘갑자기 예고 없이 우르르 몰려와 한국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사실조사가 미비한 채로 ‘편안한 일자리를 찾는다’, ‘고급 스마트폰으로 무장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불법체류 연장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보도가 많았다. 예멘 난민 입국 초창기에는 소위 가짜 뉴스도 심각했다. 특정 언론사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취업 관련 인터뷰를 짜깁기하여 그들이 취업만을 위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한국에서의 생활을 매우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내용으로 왜곡된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 말미에는 “상당수의 난민신청자는 불법 취업이 목적인 ‘가짜 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썰기가 박혔다. 나중에 이 기사가 인터뷰를 일부러 왜곡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뒷이야기를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공고히 자리잡았을 터다.

특히 예멘인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사실,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종교로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낯설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데에 도화선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슬림 사이에 집단 성폭행 놀이인 ‘타하루시’가 만연해 있다는 기사와 그밖에 해외에서 일어난 무슬림 관련 사건·사고 등이 기사화되어 퍼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의 말미에는 ‘한편 한국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식의 현황이 거의 매번 첨가되었다. 각국 대사관 등이 나서 보도가 잘못된 내용임을 해명하곤 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점점 ‘난민=무슬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혔다. 이는 곧 난민과 무슬림 둘 다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킨 것이기도 했다.

나. 2021년 아프간 난민 보도

2021년 여름,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에 따라, 심각한 인권 침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아프간 난민들에 대해 각종 인터



넷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이 급증했다. 이는 2018년도 이후 들끓기 시작한 난민 혐오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아프간 난민들이 무슬림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큰 혐오의 장이 형성되었다.

이때 언론의 역할이 매우 아쉬웠던 것은, 인터넷 상의 혐오표현을 단순히 ‘논란’ 또는 ‘찬반 논쟁’이라고 치부하며 기계적인 보도를 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도 예멘 난민 입국 당시와 똑같이 반복된 상황이다. 2018년도 길거리에서 난민의 존재를 가지고 찬반 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대부분의 언론은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의 책임이 있는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사실, 존재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 난민의 정확한 개념과 현재 정확한 난민의 현황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난민 혐오 현상을 마치 혐오가 아닌듯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이었다. 언론의 그러한 행태는 도돌이표처럼 다시 사회에 혐오의 감정이 싹트게 한 면이 있다. 아프간 사태에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에 공격 마이크를 부여하는 행위가 한국의 난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²⁾ 3년이 지나도 보도의 양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기여자’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들을 따로 명명했는데, ‘특별기여자’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새로운 용어이다. 어느 조건으로 보나 그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

2) 난민인권네트워크 (2021. 8. 24).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이었고, 탈레반에 의한 박해 가능성은 그들을 규정짓는 피상적인 용어와 무관하게 실재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난민’과는 다르다며 명백히 선을 그으려 했다. 정부의 태도는 당연한 책무로서의 난민 보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시혜적 보상’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선긋기는 시민들로 하여금 ‘난민’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위이다.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난민 혐오의 세태를 회피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지 않았던 것이 정말 아쉽다. 우리 사회에 난민 혐오가 만연하게 되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이들이 처한 상황보다는 이들에게 어떤 체류자격과 권리가 주어질 지에 더 집중되었다. 기사에는 “난민보다 더 우대할 예정”,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와 같은 헤드라인이 걸렸고, 그들이 받게 될 ‘혜택’이 ‘국민 세금’과 같은 단어와 함께 자극적으로 비교되었다. 언론이 우리 정부의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난민 보호의 책무를 더 명확히 지적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아프간 난민 보도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였다. 한 언론사에서 당시 진천의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동의 없이 망원렌즈로 촬영했다. 그 후 모자이크도 없이 이들의 모습을 전부 노출시켰고 감정적 문구와 함께 보도했다. 당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기사를 거세게 비판했다. 각계에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기사는 삭제되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그 자체로 초상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였다. 무엇보다, 난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난민법 제17조 및 제47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신상이 노출되면 본국에 남은 가족들에게 박해가 가해질 수 있는 난민으로서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해당 기사는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 기자의 주관적 관점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물론 이것은 기자가 아프간 난민들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작성하였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프간 난민들이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멘 난민에 대해 수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지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난민’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4. 난민이 이슈로서 다루어지는 방식

이상에서 2018년 예멘 난민 보도와 2021년 현재 아프간 난민 보도에서 발견되는 주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제 일반적으로 난민 관련 보도에서 혐오 근절에 저해가 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건·사고와의 결부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강화

난민이라는 정체성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부정적인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자극적으로 남용되곤 한다. “범인, 알고 보니 난민”, “난민 신분으로 머물러 왔다”와 같은 정보는 범죄 발생 사실과 연관이 없을 뿐더러, 독자로 하여금 마치 난민이라는 신분이 범죄의 주요 원인인 것과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결국, 부정적인 사건·사고와 난민을 결부시킴으로써 난민은 부정적인 존재로 집단화, 익명화, 타자화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주민 전반에 대해 발생해 왔다. 그런데 특히 예멘 난민 입국 이후에는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특성까지 덧대어지면서 더욱 자극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이에 대해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인종과 국적에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들을 배제하고 예방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으로 유지되는 취약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

나. 오보 또는 사실 확인 부족으로 인한 혐오 조장

예멘 난민들이 입국했을 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제도와 난민 지원 정책에 처음으로 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매달 140만 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나온다는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이 면제된다는지 하는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기사들이 종종 발견됐다. 해외에서 오보라고 밝혀진 기사 또는 원문에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난민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해외 사건·사고를 옮겨놓은 기사도 있었다.

언론의 생명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있을진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기사가 종종 발견되었던 것이 매우 아쉽다. 다행히 2018년 이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오보나 사실 확인 부족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의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다. 난민으로서의 특수성과 난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난민은 역사적·법적으로 일반적인 이주민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닌다. 모든 다양한 인간 군상을 완벽하게 다각도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보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난민의 대표적인 특수성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보도가 필요하다. 이 단계가 결여될 경우, 난민은 너무나도 쉽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고,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보도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르게 된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구분되는 일방적 관계에서는 난민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맥락이 삭제

³⁾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모니터링 제4호(2020. 5).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난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비행기를 타고 왔거나 또는 긴장한 청년이라면 난민이 아니라고 보는 시선 등이 그것이다.

한편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의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이며,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난민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으로 보도할 경우, 난민 본인과 본국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난민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이해도가 출신국 또는 개인마다 전부 다르고 의사소통 시에도 언어 장벽이 있으므로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난민인권센터의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난민이 해당 언론 보도의 파급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 것”⁴⁾ 을 강조한 맥락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많은 기사에서 ‘허위 난민’과 ‘난민 불인정자’가 동의어로 다뤄지곤 한다.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사실 난민 불인정이라는 결과는, 난민 심사 인력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신청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 심사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도출되는 면이 크다. ‘난민 불인정자=가짜 난민’과 같은 도식화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

4) 난민인권센터 (2019. 11),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 URL: <https://nancn.org/1987>

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난민신청자 개인에게 돌리기에 제도적인 문제를 짚을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라. 난민 개념의 무분별한 소비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난민’이라는 개념이 언론에서 다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상황에 특정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를 합쳐 비유적인 신조어를 만드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변질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희석되어 버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매우 많이 사용됐던 ‘전세 난민’, ‘보험 난민’ 등과 같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발품을 파는 행위 자체에 ‘난민’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난민들이 겪은 (또는 겪을 뻔했던) 경험과 그에 따른 공포를 가볍게 여기게 되거나 난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언론 보도 시에 간명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사회 현상을 절묘하고 명쾌하게 묘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을 테지만, 언제나 원래 단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나 무게를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5. 난민 보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3년의 시간을 거치며, 언론은 점차 자생적으로 혐오표현의 근절과 공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 오고 있다. 언론은 사회 현상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에 특정 현상을 직접 조성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주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앞으로 난민 보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의 근절

먼저, 난민들을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2018년 예멘 난민들의 입국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보도는 종종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하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이것은 낯선 존재에 대한 혐오 자체를 부추기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함께 선언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에서는 “이주민, 난민, ...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겠”

음을, “이들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표출되는 현상 그 자체를 전달할 게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한 뒤 전달해야”함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언론이 이미 이 지점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이주기구(IOM)에서 발간한 「Media Coverage on Migration: Promoting a Balanced Reporting」(2017)에 따르면, 이주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긍정적인 ‘우리’와 부정적인 ‘그들’ 사이의 반대에 근거해 ‘이야기’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주민들은 주로 개인보다는 집단화되고, 종종 위협적 특성이나 범죄, 분쟁, 갈등의 속성으로 귀속된다. 특정 행동에 대한 개별적 책임까지도 ‘문화화’ 되어 특정 이주 집단의 문화적 특징으로 귀속된다.⁵⁾ 이러한 경향을 감안한다면, 난민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에도 그것이 단순히 부정적 상황을 난민이라는 집단과 결부하여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실제로 난민의 사회부적응 등 부정적인 사례를 보도해야 할 경우라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또는 그가 속한 집단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⁶⁾하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나. 철저한 조사에 입각한 비판적 보도의 추구

둘째로, 언론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에 입각한 비판적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분야의 보도에 다 똑같이 해당되지만, 난민 보도의 경우라면 더욱 중요하다. 허위 정보 또는 왜곡되거나 부족한 정보로 인해 얼마든지 혐오 현상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난민과 관련하여 다양한 허위 정보가 잘못 보도되었던 여러 사례가 떠오른다. 개중에는 실수로 해외의 오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도 있었고, 드물게는 일부러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왜곡된 정보를 직접 생산해 낸 것도 있었다.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난민에 대한 보도는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 보호의 의무를 이해하고, 난민 인정 심사 절차 및 난민 인정 제도 전반의 여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관련 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해 만연히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보도로 이어져 혐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위험성이 있다.

다. 난민에 대한 특정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의 사용 지양

무엇보다, 난민을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으로 보는 등 특정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하여 동의없이 보도하였던 기사도 내용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난민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방향 또는 일방적으로 관찰자의 시각에서 동정심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은 그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에서도 “긍정적 고정관념도 당사자들에게는 혐오표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문제로 이미 지적한 난민 개념의 무분별한 소비도 같은 선에서 볼 수 있다. 특정한 사회 현상에 ‘난민’이라는 단어를 붙여 신조어를 만들 때, 그 신조어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은연중에 난민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한다.

6. 나가며

예멘 난민과 아프간 난민의 입국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난민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박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자,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다. 우리나라가 지닌 난민 보호의 책무를 다하며 편견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난민과 난민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늘 든든히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난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사려 깊고 섬세한 시각으로 난민들의 이야기를 보도해 주기를 바라 본다. 🙏

5) “An important feature of media reporting on migration related issues the organization of the ‘story’ on the basis of an opposition between a positive ‘us’ and a negative ‘them’. Migrants are frequently represented as group rather than as individuals. They are often attributed characteristics of threat, or associated with problems, in particular crime and conflicts and ev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bout specific actions is culturalised, attributed to the cultural features of the specific migrant group.”
(Media Coverage on Migration: Promoting a Balanced Reporting (2017), IOM, 4쪽)

6) 난민인권센터 (2019. 11),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 URL: <https://nancen.org/1987>